

「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
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

주간 북한경제 동향

Weekly DPRK Business Review

2010년 5월03일(월)
통권76호(제3권 제16호)

서울시 서대문구 중정
로2가 76번지 정성빌
딩 3층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전 화 02-782-2677
팩 스 02-3452-2312
이 메 일 master@dprkinvest.org

남북경협은 제재의 수단이나 볼모가 아니다

북한이 23일 금강산 내 부동산에 몰수와 동결 조치를 취한 데 대하여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 조짐이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연합뉴스』가 인터넷 판으로 25일 오후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를 30일 이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그 주요 조치 중 하나가 기존 남북 민간교역을 제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민간교역을 북한에 현찰이 들어가는 루트로만 이해하는 정부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약 정말로 남북간의 민간교역을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면 이것은 한참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민간교역을 제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남한 내부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모르되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교각살우를 자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실효성 측면에서 보자. 아마도 이명박 정부는 30%대에 달하는 북한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믿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착각이다. 착각도 아주 큰 착각이다. 일본의 경우가 이것을 증명한다. 냉전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97년만 하더라도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일본은 23%의 비중을 차지하여 30%의 중국에 이어 부동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납치문제 등을 이유로 일본 정부가 교역을 제재의 수단으로 삼음에 따라 2009년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0%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일본이 대북 교역을 제재했다고 해서 북한이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불편이야 느끼겠지만 중국이라는 활로가 있는 한 누가 하던 제재로 북한이 입을 타격은 대단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협이 알려주는 사례이다.

오히려 남한의 대북 교역 제재는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 밑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도록 밀어주는 꼴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일본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인데, 일본이 교역 제재로 비워준 공간은 남한과, 특히 중국이 대체했던 것이 거의 경험이다. 이런 상태에서 남한이 일본의 경우를 되풀이한다면 중국이 그 공간을 대체하는 것도 되풀이될 것이다.

하지만 민간교역을 제재의 수단으로 하겠다는 것이 위협한 것은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로 지적할 사항은 민간 교역의 제재는 대북 교역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협사업자의 생존권을 무시, 박탈하는 행위라는 점이다. 물론 정부는 경협사업자에 대한 보상을 말하

겠지만 언급생심 보상의 수준이 경협사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다. 또 보상 대상을 얼마나 협소하게 한정할지도 볼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경협사업자가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지사가 되어 통일이라는 민족적 대의에 헌신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북한에 현금을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었다. 여러 요소를 검토했을 때 비즈니스의 가치와 전망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 수단이라는 사업 외적 요인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면,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두 번째로 경제를 정치의 수단이나 볼모로 삼는 행태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지나가듯이 이번 사태도 시간 흐름 속에 지나갈 것이고, 그때 남는 것은 당시 우리가 이 사태를 어떻게 맞이하고 처리했는가라는 경험이고, 선례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혜롭게 사태를 처리하는 방향은 좋은 경험,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이든 북이든 경제를 정치의 볼모로 삼는 나쁜 선례를 얼마나 많이 남겨왔고, 그 나쁜 사례가 끼쳤던 나쁜 후과 역시 얼마나 많았는가?

이번 사태를 이명박 정부가 어떤 방향에서 처리하는가는 곧바로 개성공단 존폐와 직결될 것이다. “뒤편, 남북화해의 상징인 금강산도 날린 마당에 개성공단마저 날린들 어떠냐?”는 식의 사고라면 위험천만하다. 이런 식의 사고가 한 번 전쟁을 했는데, 한 번 더 하면 어떠냐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남이든 북이든 개성공단을 닫겠다는 것은 곧 남북관계에서 최소한의 지렛대마저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가는 제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남한은 1단계 공단 부지조성에만 2,600억 원이 들어갔을 뿐 아니라 100여개 입주업체에, 협력업체만도 8,000개에 이른다. 경제적 가치관 측면에서 금강산 관광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은 경제난 속에서도 40,000명 이상 북한 근로자가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며, 서울 진격로의 중심축이었던 최선방의 장사포를 5km 이상 올려내는 군사적 위험을 감수한 곳이다. 이렇듯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남과 북 모두 서로가 서로를 얹어놓은 곳이다. 그런데 이런 곳을 폐쇄하겠다는 것이 무얼 의미하겠는가? 그리고 그 다음의 남북관계는 또 어떠할까? 참으로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다시금 강조하건데, 정부는 민간교역을 대북 제재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제76호 목 차

이주의 칼럼

표피적 보도만으로는 북한 알지 못한다. ----- 2

이주의 주요 기사

北군부 금강산 관광사업 직접 챙긴다. ----- 3

"北 금강산댐'-南 평화의댐' 연계 활용해야"----- 4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 잇따라 방북 ----- 5

라선투자, 北체제 유지 겨냥 ----- 6

금강산 업체 "정부 수습책과 지원 필요" ----- 7

3월 남북교역 2억弗...작년보다 89% ↑ ----- 8

北 "우리도 금강산 관광의 피해자다" 주장 ----- 9

"北라선법 개정, 中 동북아경제공동체' 연관"----- 10

北 금강산동결 완료..남북 후속대응 주목 ----- 11

남북포럼 "남북교역 축소시 북한 연 2억달러 피해"----- 12

추천논문 /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시사점--13

함께 보는 최근 북한단신 / ----- 13

이 주의 북한 관련 행사

* 금주는 특별한 행사가 없습니다.

이 주의 칼럼

표피적 보도만으로는 북한 알지 못한다.

조동호(이화여대 교수, 북한학)

거의 군사 전문가 수준이다. 어뢰와 기뢰, 폭뢰의 차이는 물론이고 이젠 잠수함과 잠수정이 어떻게 다른지도 안다. 하긴 겨울올림픽 때는 피겨스케이팅 전문가가 되어 트리플 악셀과 러츠, 토루프를 이야기했다. 때마다 항상 그랬다. 언젠가는 쇼트트랙의 기술들을 구분했고, 그전에는 줄기세포의 종류를 줄줄 외웠다. 언론의 보도 경향 탓인가, 라고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사건 때마다 기술적 분석에는 상당량의 지면과 시간을 할애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정책적 분석에는 그만큼 소홀하다.

"사실 저는 북한 경제가 전공이거든요." 찜찜해서 말을 붙이면, 묻는다. "화폐개혁 책임자가 총살당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가만있기 뭐해서, 답을 한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요"라고 첫 문장을 시작하면서.

나는 박남기 계획재정부장이 정말 총살당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설령 총살당했다고 해도 화폐개혁의 실패 책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이 아무리 엉망이고 한심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수년간 준비한 정책의 성패 여부를 불과 한 달 만에 판단했을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총살이 사실이라면, 다른 죄목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횡령, 뇌물 등 북한 고위층이 흔히 처벌되는 죄목 말이다.

화폐개혁이 실패라고도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물론 북한의 현실로 볼 때 장기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실패라고 단정할 근거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번 북한의 화폐개혁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인플레이션을 해결한다는 목적 이외에도 신흥 부유층을 몰락시킴으로써 싹트기 시작하는 자본주의를 사전에 격결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 시장을 인위적으로 없애고 계획경제로 복귀하겠다는 목적도 있었고, 새로운 화폐로 교환함으로써 발권력(發券力)을 통한 재정확충이라는 목적도 있었다. 당연히 이들을 바탕으로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이외의 목적은 대체로 성공하고 있고, 따라

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화폐개혁이 실패라고 단정짓기는 이르다. 사실 실패의 증거로 언론에서 거론하는 인플레이션조차 설득력이 크지 않다. 화폐개혁으로 임금이 100배 올랐으므로 물가가 100배 이상 올라야 실패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표적 품목인 쌀값의 경우 화폐개혁 이후 50배가량 올랐다가 이제는 20배 정도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만약 언론 보도대로 총살이 사실일 만큼 화폐개혁이 실시된 지 한 달 만에 실패했다면, 북한 지도부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밖에 없다.

우선은 김정일의 판단능력의 문제다. 화폐개혁은 김정일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실시하자마자 실패했다면, 김정일은 현재 북한의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북한 지도부의 정책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 어느 라인에서는 화폐개혁을 주장해도 현시점에서는 바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가 어느 라인에선가는 제기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주도했다고 해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게 설익은 정책이 시행되어도 아무도, 심지어 김정일조차 제어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저 가만히 듣는다. 반론도 않는다. 언론에 나오지 않아서인가, 라고 나는 짐작한다. 물론 나의 추론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언론의 일차원적인 보도가 정작 핵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을 뿐이다.

화폐개혁의 실패 여부보다는 그 원인이 더욱 중요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북한과 의사결정 체계가 고장 난 북한을 다루는 방안은 달라야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언론이 보다 분석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사건일수록 더욱더.

(이 글의 원문은 <http://news.joins.com/article/844/4131844.html?ctg=20>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北군부 금강산 관광사업 직접 챙긴다

-- 4월 26일 동아일보

북한 국방위원회 산하의 외자유치기관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총재 박철수)이 올해 1월부터 금강산관광 운영에 참여할 중국 기업들을 물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 A 씨는 25일 이같이 전하며 “일부 협상은 상당히 진척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 지도부는 금강산과 개성에서 현대그룹을 내보낸 뒤 대풍그룹이나 국방위 소속 기관이 다수의 중국 기업을 임대사업자 형식으로 끌어들여 관광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식통 B 씨도 “대풍그룹은 국가개발을 위한 투자유치의 전반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문제에도 자문 및 지도 감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현대아산과 결별하더라도 계약 위반에 따른 복잡한 송사가 계속될 것”이라며 “어떤 중국 기업도 현대아산과 같은 포괄적 사업자로 나서지 않을 것인 만큼 북한으로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대풍그룹 또는 국방위 소속 기관이 금강산관광 운영에 직접 나선다면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구조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현대아산이라는 외부기업이 포괄적이고 독점적인 사업권을 행사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사업자가 되고 다수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형식이 된다. 특히 현재 노동당 소속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내각 소속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신 국방위 소속 기관, 즉 군부가 직접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앙코르와트에 박물관 건립 추진

-- 4월 26일 아주경제

북한이 캄보디아의 역사적인 앙코르 와트 사원 인근에 전자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캄보디아 정부가 26일 밝혔다.

캠 사릿 문화부 장관은 이날 북한의 만수대 해외사업부가 앙코르 와트 사원 인근에 사원 역사를 보여주는 전자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캄보디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릿 장관은 자신이 지난주 만수대 해외사업부 관계자 및 리인석 캄보디아 주재 북한 대사와 만나 사안을 논의한 뒤 박물관 건립 방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물관이 건립되면 앙코르 와트 관광객들이 사원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박물관 건설 이전에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물관 건립 방안을 더 논의하기 위해 오는

6월 만수대 해외사업부 관계자들과 다시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12세기 건축물인 앙코르 와트 사원은 캄보디아의 주요 관광명소로 캄보디아 북서부 시엠립에 있다.

러시아 천연가스, 북한 악재로 휘청

-- 4월 26일 한국경제TV

2015년 도입을 시작해, 2017년부터 연간 750만 톤 이상의 규모로 확대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사업이 최근 북한 변수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실상 북한 경유 파이프라인 건설은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이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을 경유해서 한반도를 잇는 파이프라인 건설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천안함 사태와 북한의 일방적인 자산 몰수로 그 위험성이 더욱 부각된 상태입니다.

당초 정부는 2015년부터 연간 750만 톤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와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가스관이 공사 중이지만, 블라디보스톡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방안은 좀처럼 확정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공급 방안으로는 북한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 건설방안(PNG)과 액화천연가스로 바꿔 배로 운송하는 방안(LNG)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건설은 기체인 가스를 액체로 바꾸어야 하는 해양운송 방안보다 비용도 절감되고 설비도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북한 악재로 인해 결정이 쉽지 않게 된것입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이미 반년째 미뤄진 도입방안 확정을 다음달에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라면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공급선 확보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 당시 협의가 시작된 러시아산 천연가스 사업은 중동-동남아에 편중되어 있는 천연가스 도입선을 다양화할 수 있고, 운송일정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북한 발 악재가 터지면서 러시아산 가스도입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北, 엔지도 관광 비자 발급 개시

-- 4월 26일 연합뉴스

북한이 중국 엔지(延吉)에서 관광 비자 발급 업무를 개시, 연변(延邊)에서도 자유롭게 북한 관광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길림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 조선관광사 엔지대표처가 지난 13일부터 엔지에서 비자를 발급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룡정(龍井)시 싰허(三合)통상구를 출발, 북한 청진에 도착한 뒤 전세기로 평양으로 가는 북한 관광 노선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 변경 일대를 하루 코스로 돌아보는 변경 관광은 룡정 등 중국 변경도시에서 발급하는 변경관광 통행증만으로도 가능했지만 평양 등 북한 내륙을 관광을 하려면 반드시 선양(瀋陽)북한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수속을 밟아야 했다.

이 때문에 북한 관광에 나서는 중국의 관광객들은 대부분 선양에서 고려항공을 타거나 단둥(丹東)을 거쳐 신의주로 들어가는 열차를 이용해왔다.

신문은 또 룡정시가 그동안 관할구역 내 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던 북한 변경관광 통행증 발급을 연변주의 8개 시와 현 거주자는 물론 외지인들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 조치로 싰허 통상구를 거쳐 북한 칠보산 등을 관광하는 변경 관광도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 당시 북·중 양측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중국은 2006년 금지한 자국민의 북한 단체 관광을 지난 12일부터 전면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400여 명을 태운 관광열차가 처음으로 단둥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으며 연변주가 훈춘-라선-러시아 극동 노선을 비롯한 다양한 북한 관광 노선 신설을 추진하는 등 북한 관광이 활기를 띠고 있다.

"北 금강산담'-南 평화의담' 연계 활용해야"

-- 4월 26일 조선일보

북한 임남담(일명 '금강산담')으로 인한 남한 북한강 유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남담과 남측의 '평화의담'을 묶어 남북한이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한반도발전연구원의 김영봉 원장은 26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원장 박명규)가 '녹색평화의 비전과 21세기 한반도'를 주제로 연 학술회의 발제에서 "북한의 임남담이 연간 약 17억t의 물을 차단함에 따라 남한 지역의 북한강 수위가 크게 떨어졌다"면서 "이로 인해 북한강 유역의 생태계에 큰 변화가 생겼을 뿐 아니라 평화의담 하류의 첫번째 발전소인 화천발전소의 경우 전력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남북한 당국의 합의 아래 기초조사를 벌여 평화의담 담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평화의담 담수를 통해 임남담까

지 내륙수운을 개발하고 이를 물류유통과 금강산 관광수로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아울러 화천담까지 묶어서 이용하거나, 임남담 물을 일정하게 평화의담으로 방류해 화천담 전력생산과 수도권 용수공급에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나아가 임남담과 평화의담을 모두 다목적담으로 전환해 북한강 유역의 생태계 복원과 홍수조절, 전력생산, 생활용수 확보 등에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북한강 외에도 임진강, 한탄강, 소양강의 본류가 북한에서 시작해 비무장지대를 거쳐 남쪽으로 흐른다"면서 "이런 공유 하천들을 생태적으로나 수자원 측면에서 남북이 공동 활용하는 '녹색평화의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원장이 언급한 북한의 임남담은 당초 1980년대 동해안 안변청년발전소에 발전용수를 대기 위해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남담 건설로 남한의 북한강 수위가 낮아져 인근 지역 용수난이 심화되고, 유사시 북한의 수공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남한 정부는 1989년 강원 화천군에 '평화의담'을 세웠다.

'상하이 엑스포 '북한관' 오픈... 北 김영남, 개막식에 참석할 듯

-- 4월 26일 국민일보

엑스포 사상 처음으로 상하이 엑스포에 참가한 북한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엑스포 사무국이 지난 20일부터 엑스포 단지 시험 운영에 들어간 뒤 북한관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관은 한국관과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면적은 1000㎡로 한국관(6160㎡)의 6분의 1 수준이다. 한국관을 비롯해 대부분이 각국에서 자체적으로 건설한 것과 달리 북한관은 중국 측이 건설해 제공한 임대관이 다.

흰색 바탕의 외벽에 '조선' 'DPR Korea'가 북한기와 함께 그려져 있는 북한관은 다른 국가관에 비해 소박하다. 북한관의 주제는 '평양의 도시발전'이다. 단층인 1층 전시공간에 들어서면 왼쪽에 대동강, 평양시내가 나오는 대형 사진과 4.5m 높이의 주체사상탑 축소 모형이 있다. 또 옆에는 대동강 모습을 형상화해 그 위로 돌다리를 만들어 놓았으며, 맞은편에는 정자와 고구려 고분벽화를 재현한 동굴이 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왼쪽 높은 곳에 대형 TV가 설치돼 김일성 주석의 현화 장면 등 동영상을 방영하고 있다. 그 아래로 5대의 작은 TV를 통해 평양의 역사문화, 건축, 생활 등을 소개하고 있다. 북한관 오른쪽 안쪽 구

석에는 북한 소개 책자들이 진열돼 있으며, 남자 판매원이 우표 등 기념품을 팔고 있다. 북한관은 단조롭고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편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번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고위 소식통은 “중국이 각국 영수들을 초청했고 북한도 이에 포함됐다”면서 “김 상임위원장이 국방위원장을 대신해 개막식에 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 잇따라 방북

-- 4월 27일 노컷뉴스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의 방북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 적십자적신월 연맹 상임위원회의 헬레나 콜호넨 사무국장은 26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마시모 바라 상임위원장이 북한 조선적십자회의 초청으로 방북해 3~4일 정도 머물면서 조선적십자회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콜호넨 사무국장은 “국제 적십자적신월 연맹 상임위원장이 개별 국가를 방문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며, 위원장의 이번 방북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콜호넨 사무국장은 상임위원회는 “적십자 연맹의 현장 실무를 직접 주관하지 않고 있다”면서 마시모 바라 상임위원장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제적십자 상임위원회는 아랍권의 적신월 연맹과 비아랍권의 적십자 연맹의 최고 심의기구로, 두 연맹의 활동을 지도하고 합동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의 마거릿 찬 사무총장도 26일 북한에 도착했다.

세계보건기구 다니엘 엡스타인 대변인은 “찬 총장이 북한에서 병원과 진료소, 의학연구소 등 보건 시설들을 방문할 계획이며, 보건상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들과 평양 주재 유엔 관계자들과 면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찬 총장은 방북 기간 동안 북한 당국과 함께 공중보건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총장의 방북 역시 이례적으로, 지난 2001년 그로 할렘 브루틀란트 사무총장의 방북 이후 9년 만에 이뤄졌다.

北, 오늘부터 금강산 민간자산 동결 집행

-- 4월 27일 뉴시스

북한이 정부소유 자산을 동결한데 이어 27일부터는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민간 소유 부동산에 대한 동결 조치에 나서겠다고 통보해왔다. 앞서 북한 명승지개발지

도국은 23일 우리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 5개 부동산 물수와 나머지 남측 민간 소유 부동산의 동결 방침을 발표하며 현대아산측에 27일 오전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동결 조치에 입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현대아산을 포함한 31개 민간기업 46명은 27일 오전 9시40분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금강산 지구로 들어갈 예정이다. 금강산 관광지구 동결 조치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금강산을 방문하는 민간기업 관계자들의 귀환 일정도 동결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조치가 완료되는 30일까지 일정에 맞춰 동결 대상 관계자들이 입회할 수 있도록 방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아산측은 북측과 부동산 동결 일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관리인원 철수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13일 우리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면세점, 온천장을 동결했다. 아직 동결되지 않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민간 소유 부동산으로는 현대아산이 운영하는 금강산·외금강 호텔과 에머슨퍼시픽 소유의 금강산 아난티골프·스파리조트, 일련인베스트먼트 소유의 금강산 패밀리리치호텔·금강산 핫집 등이 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 정부 자산 물수와 민간 자산 동결 조치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동결 집행이 끝나는 30일 남북 민간 교역을 축소하는 방안 등 대응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금강산면회소 국유재산등록 안해"

-- 4월 27일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몰수하겠다고 밝힌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 대해 정부가 국유재산 등록을 해 놓지 않았던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기획재정부와 통일부에 따르면 이산가족면회소의 관할 관청인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약 550억원을 들여 2008년 7월 이산가족면회소를 완공한 이후 이날 현재까지 국유재산 등록을 하지 않았다.

국유재산법과 그 시행령은 국유자산을 취득한 경우 관리 관청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자산의 경우 북한 법인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등기를 함으로써 재산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경우 등기를 할 수 있는 북측 기관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이 설치기로 합의한 금강산관리위원회를 통해 등기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북한과의 금강산관리

위 설치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남북간 협의를 거쳐 만든 북한법인 `금강산 관광지구 부동산 규정'에 따르면 건물을 새로 건설한 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관광지구 관리기관에 건물 소유권 등록 신청서를 내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를 계기로 정부가 북한 내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3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산가족면회소 등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한 금강산 부동산 5건을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라선투자, 北체제 유지 겨냥

-- 4월 27일 중앙일보

중국이 최근 북한 두만강 유역 라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것은 동해 전략요충지 확보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경제난에 처한 김정일 체제의 현상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가 분석했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위원은 26일 미국 싱크탱크 노틸러스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통해 "중국의 많은 사영기업이 현 북한체제에서 대북투자의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라진-선봉 투자를 결정한 것은 북한경제를 역내에 통합시키는데 필요한 체제개혁보다는 오히려 현 체제 지속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스나이더는 "중국정부가 라진-선봉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지렛대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에 지도체제를 유지할 생명선과 개혁을 회피할 수단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나이더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라진-선봉 지역을 방문하고, 라선시(라진-선봉)시 당 책임비서에 임명된 전 무역상을 임명하는 등 외자유치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거론하며 "북한 지도부가 흔들리는 체제를 연명하기 위한 현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배경을 분석했다.

스나이더는 "북한의 화폐개혁 조치와 시장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고려할 때, 북한의 외자유치 시도는 새로운 경제개방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현금 수입원을 창출해 지도자들의 재정상태를 개선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입장과 관련, 스나이더는 "중국은 강력한 대북 체제 결의인 유엔 안보리 1874호를 전례없이 승인했고

그 이행에 참여하고 있지만, 중국은 안보리 결의의 의도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나이더는 "중국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채택 직후 결의 내용은 제재가 전부는 아니며,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외교적 수단이라고 밝혔고, 원자바오 총리의 지난해 10월 방북때 다양한 북-중 경제협력 방안을 제공했으며, 최근 몇 달간 미국을 방문한 중국 인사들은 대북제재완화 요구의 실현 가능성을 조용하게 탐문을 해왔다"고 전했다.

"금강산 부동산 매입한 中기업 아직 없다"

-- 4월 27일 연합뉴스

북한이 몰수 또는 동결 조치한 금강산 부동산에 대해 중국 기업이 매입계약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27일 "근래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 조치가 예고되면서 한국 정부가 중국 외교부 아주사 측에 문의한 결과 관련 부동산을 인수한 중국 기업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일부 중국 기업들이 북한 관광 사업에 나서기는 했지만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사업권을 취득한 중국 업체도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 악화로 상당기간 중단돼 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중국 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으나 정작 중국 기업들은 금강산 부동산의 경우 재산권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 있다는 점에서 매입을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 기업들도 대북 투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자국내 해당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아직 중국 측에 한국 정부 또는 한국 기업 소유의 금강산 부동산에 대한 불매입 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대응을 검토중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23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산가족면회소 등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동산 5건을 몰수하고 현대아산 등이 소유한 나머지 민간 부동산을 동결하는 한편 동결 대상 건물의 관리 인원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은 아울러 이날부터 30일까지 현대아산 등의 관계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금강산 현지에서 부동산 동결조치를 집행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당국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 및 동결을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불법부당한 조치"로 보고 북한 당국이 부동산 동결 조치를 완료하는 30일 이후 대응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법적절차에 따라 자신들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 자들에 넘기겠다고 밝힌 부동산은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며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투자한 금액은 모두 1천242여억원이다.

北, 위성통신 갖춘 해상탐색구조센터 가동

-- 4월 27일 노컷뉴스

북한에 위성통신설비를 갖춘 해상탐색구조조정센터가 건립돼 항해안전과 해상환경보호를 맡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전했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27일 "북한의 국가해사감독국이 지난해 4월 해상에서 각종 비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에서 보내오는 신호에 따라 즉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해상탐색구조조정센터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민족자료센터의 위치한 해상탐색구조조정센터는 국제적 연계망과 현대적 설비들을 갖추고 북한의 무역선과 외국선박 그리고 세계의 각 대양에서 항해하는 북한 무역집배(무역선)의 항해안전을 위한 기술봉사를 제공할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선신보는 "센터에는 위성통신설비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국제적으로 새로 의무화된 선박의 장거리식별 추적체계가 도입돼 선박위치뿐 아니라 안전운항 상태와 관련된 자료를 실시간 처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가해사감독국 김영길(34살) 차장은 "센터 발족으로 해사감독사업을 국제적기준에 맞게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양한 아랍 문화... 제3회 아랍문화축전'센터에서는 설립 후 지난 1년동안 북한 수역과 국제항해수역에서 12건의 각종 비상경보신호를 받아 즉시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북한은 1986년 4월 16일에 국제해사기구에 가입했다"고 덧붙였다.

금강산 업체 "정부 수습책과 지원 필요"

-- 4월 27일 연합뉴스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이 북한의 부동산 동결 조치에 입회하기 위해 27일 방북했다.

이날 방북한 인원은 금강산 관광 관련 28개 업체 관계자 41명으로, 동해선 육로를 통해 오전 9시40분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 지구로 들어갔다. 이 가운데 1명은 오후 5시께 귀환하고 나머지 인원은 현지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30일까지 차별로 나올 예정이다.

앞서 북한은 27~30일 금강산의 민간 소유 부동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실행하겠다고며 `부동산 소유자 및 대리인은 현장 입회를 위해 27일 오전 11시까지 금강산 지

구 내 금강산 호텔에 집결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3일 이산가족면회소 등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금강산 부동산 5건을 동결한 북한은 23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들 5건의 부동산을 몰수하고, 나머지 민간 부동산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북한 조국래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부회장은 "지금 시점에서 남과 북 모두에게 바라는 것은 부동산 동결조치 해제"라며 "북한 측이 바라는 협상태이블에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가 경험기금을 선 지원을 해주고 후에 북측하고 회담하든지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본다"며 "이런 때 정부가 투자자를 위해서 좋은 조치, 선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력한 대응책 외에 투자자에 대한 보상, 수습책도 동시에 나와야 한다"며 "정부가 투자자에 대한 수습책을 빨리 세워줘야 우리도 북측에 대해서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고 힘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송대우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사무국장은 "30일 모든 조치가 끝나고 난 후 협회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북측에 대한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전달은 정부채널을 통해 하고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분위기를 보고 오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G20, "북한, 농업식량안보기금 수혜 자격 없다"

-- 4월 28일 노컷뉴스

미국과 한국 등 20개 선진국 모임인 G20이 저개발국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농업식량안보기금'이 출범했으나, 북한은 세계은행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의 수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디에나 피터슨 대변인은 26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IDA)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나라들에게만 농업식량 안보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북한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의 안젤라 피타도 대변인도 "현재 전 세계 79개국이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 IDA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북한의 경우 세계은행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개발협회(IDA)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게이츠 재단의 피터슨 대변인은 그러나, "만일 농업식

량안보기금이 확충되고 해당 국가로부터 설득력 있는 이
유가 제시되면, 농업식량안보기금 운영위원회가 국제개
발협회(IDA)의 비적격국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한편 게이트 재단의 빌 게이트 회장도 지난 22일 미
재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지원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지난 22일 출범한 '농업식량안보기금'은 미국과 한국
등 주요 선진 20개국(G20)가 저개발국의 식량난 해소와
농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민간재단인 빌 & 멜
린다 게이트 재단이 3천만 달러를 출연했다.

농업식량안보기금은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때 설립하기로 합의된 기금으로, 오는 2015년까
지 1일 소득 1달러 미만 인구를 1995년 수준의 절반으
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北, 백두산지구에 동식물 6,800여종 서식 확인

-- 4월 28일 노컷뉴스

백두산지구는 종자식물1,857종과 동물 5,000여 종
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최근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백두산지구에 30여개의 경관류형과 2 000
여종의 동식물종을 새로 확정해 현재까지 백두산생태계
에는 종자식물1,857종과 동물 5,000여종이 존재하는것
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중앙통신은 "백두산의 대표적인 경관류형들은 사스레
나무림대, 가문비나무림대, 떨기나무림대, 분비나무림대,
이깔나무림대, 기암대, 초원대 등이며, 백두산밀영 고향
집 일대에서만 두메오리나무림대, 갯버들림대, 무림대를
비롯하여 10여 종이나 새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백두산 정일봉과 백두산밀영 고향집을 중심으로
소백산, 간백산, 사자봉, 곰산, 선오산일대에서는 흙지네,
산애기메뚜기, 마당잠자리, 노랑긴등불나비와 잣나무, 숲
돌꽃, 난쟁이돌꽃, 야광나무 등 600여 종의 희귀한 동식
물종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3월 남북교역 2억弗…작년보다 89%↑

-- 4월 28 연합뉴스

3월 남북교역 규모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0% 가까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남북교역 규모는 2억
403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1억824만 달러)보다
88.5% 증가했다. 이는 경기침체 전인 2008년 3월(1억5
천726만 달러)보다도 29.7% 많은 것이다.

지난달 남북교역에서 반출건수는 4천586건, 반출금액

은 8천436만 달러였고 반입건수는 4천85건, 반출금액은
1억1천967만 달러였다.

교역수지는 3천531만 달러 적자로 적자 규모는 2008
년 10월(3천539만 달러)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컸다.

남북 간 교역 경로는 도라산 육로가 많이 이용돼 전체
교역액의 67.6%(1억3천798만 달러)를 차지했다.

남북교역에서 반출액의 84.3%(7천113만 달러), 반입
액의 55.9%(6천685만 달러)가 도라산 육로를 통해 이뤄
졌다. 이로써 올 1분기 남북교역 누적 규모는 5억2천
672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억2천66만 달러)보다
6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1분기 남북교역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6억6천
608만 달러)의 31.6%에 달한다.

남북교역 규모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북 간의 정치적 관계는 지난해에 이어 그리 좋은 상
황이 아니지만 교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 1조8천억+α"(종합)

-- 4월 28일 연합뉴스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의 김영운 대표는 28일 "금강
산 관광 중단으로 남측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액은 1
조8천778억원 이상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호텔에서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
부 주최로 열린 '금강산 관광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조찬 강연회에서 "관광 중단의 대가는 유·무형 경제 손
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대아산의 사업권 및 시설 등 자체 투자액 9
억8천669만7천달러(1조1천51억원, 1달러 당 1천120원
적용시)와 2천268억8천만원 ▲관광공사와 애머슨 등 기
타 업체들과 이산가족면회소 등 '외부 투자액' 1천879
억9천만원 ▲현대아산의 관광매출 손실 2천368억4천만
원 ▲금강산 현지 협력업체 매출 손실 938억6천만원 ▲
고성군 지역 매출 감소 272억2천만원(월평균 13억6천만
원)을 합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계산했다.

김 대표는 "계획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나타나는 손
실에는 (액수로 환산할 수 없는) 부가가치, 생산, 고용
유발 효과도 포함돼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은 비록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큰 상징적 의미
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이 남측 자산을 몰수하는 조치를 단행
했기 때문에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은 사실상 종료의 길로 들어선 것
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 수단으로 연계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라며 "비록 정부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라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없던 면이 있지만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면치는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이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을 억류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마지막으로 남은 남북협력의 장인 개성공단에 대한 대책도 염두해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남한 정부가 남북관광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북한도 남한이 그와 같은 의도를 보일 경우 적극 수용하고 모든 것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北 "우리도 금강산 관광의 피해자다" 주장

-- 4월 28일 연합뉴스

관광 중단 장기화에 따른 금강산지구 내 부동산 몰수와 동결조치를 단행한 북한이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산지구 내 민간부동산 동결조치에 입회하기 위해 27일 방북했다 28일 오전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로 돌아온 조국대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부회장은 북측 김광운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장이 동결조치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조 부회장은 "김 국장이 27일 오전 업체관계자들에게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돈 몇 푼 때문이 아니라 민족화합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는데 남쪽 정부는 이것을 돈 몇 푼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우리의 가장 큰 명절인 태양절을 즐기는 것도 비판하더라'며 불평했다"라고 말했다.

또 "'동결' 딱지를 붙인 것은 북쪽이 아닌 남쪽의 잘못 때문이다. 피해자는 북쪽이고 가해자는 남쪽이다. 여러분도 피해보상 요구는 남쪽정부에 하라. 우리도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조 부회장은 "북의 설명은 10여 분 동안 진행됐고 북측도 어떤 돌발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는 분위기였다"며 "설명회장에는 군인들이 없었으나 각 시설을 돌며 딱지를 붙일 때는 군인들이 동행했다"라고 덧붙였다.

동결조치에 입회했던 하나온커뮤니케이션즈 제갈종익(52) 사장은 "상황설명 후 곧바로 시설물에 대해 딱지를 붙였다"며 "분위기는 덤덤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집행과정에서 우리 업체 측 입장을 전달하거나 요구할 상황이 못됐으며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며 "

우리를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27일 오전 금강산으로 들어갔던 업체관계자 41명(내국인 40명, 일본인 1명)은 당일 오후 5시 1명이 복귀한 데 이어 28일 오전 9시40분 16명이 복귀했으며 오후 3시30분에 17명이 돌아오고, 나머지 7명은 30일까지 돌아올 예정이다.

두얼굴의 북한

-- 4월 29일 중앙일보

북한이 천안함 침몰 이후 대남 긴장관계를 조성하면서도 경제적인 거래는 계속하고 있다. 경제난을 고려해 실속은 챙기겠다는 두 얼굴 행보다.

북한은 27일에 이어 28일에도 비치호텔 등 금강산의 남측 부동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강행했다. 북측은 첫날과 같은 방식으로 출입구에 '동결' 딱지를 붙였으나, 관리인원 추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그러나 예정된 교역에 대해서는 단결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경북 경산지역 사과나무 묘목 40만 그루가 북한으로 수출됐다. 경산시에 소재한 경산묘목조합은 27일 "지역 내 A종묘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1년생 사과나무 묘목 40만 그루를 북한에 수출했다"며 "묘목 거래는 제값을 받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40만 그루는 국내 최대 묘목 생산지인 경산 지역 올해 전체 (사과나무 묘목) 생산량 120여 만 그루의 33% 해당하는 규모다. A종묘의 B대표는 "국내 C수출업체를 통해 2월 말 6만6000그루를 시작으로 4월 23일까지 묘목 40만 그루를 인천항으로 실어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까지 우리 기업들이 북한과 진행한 남북교역액(반입·반출) 규모는 5억1787만4000달러(5797억5994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대북 지원과 사회문화협력을 제외한 순수상업거래는 반입 2억8544만2000달러며, 반출은 2억3243만2000달러다. 이 중 개성공단·금강산관광과 관련한 경제협력을 제외한 일반교역(위탁가공 포함)액은 1억6732만6000달러(1873억214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7만8000달러 늘어난 규모다.

北, 현대아산 소유 금강산 부동산 동결

-- 4월 29일 중앙일보

북한은 당초 예정보다 하루 빠른 지난 28일부터 금강산의 현대아산 소유 부동산에 대한 동결에 착수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측 인사들이 28일 오후 3시30분 금강산 골프장 동결을 마친 뒤 1시간20분간 근처에 있는 현대아산 소유 부동산인 콘크리트 혼합장, 눈썰매장, 해수욕장 등에 대한 동결조치를 집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 등은 29일 중으로 금강산 호텔, 외금강 호텔 등 현대아산이 소유한 현지의 주요 관광 인프라에 대해 동결 조치를 진행한다.

당초 북한은 27~28일 현대아산 이외의 협력업체 부동산, 29일 현대아산 부동산을 각각 동결한 뒤 30일 남은 부동산에 대해 동결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었다.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동결은 해당 건물 출입구에 '동결'이라고 적힌 딱지를 붙인 뒤 출입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北라선법 개정, 中 동북아경제공동체' 연관"

-- 4월 29일 연합뉴스

중국을 지난해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이른바 '중국판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의 재정립에 나섰고, 북한이 외자유치를 위해 라선특별시 관련법 개정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도 이와 연관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중앙대 북한개발협력학과 겸임교수)은 29일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주최 월례발표회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작년 10월 방북 이후 북한은 라선법을 개정하고 '라선특별시' 개발과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설립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외자 유치 정책과 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평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2002년부터 본격화한 동북진흥계획을 한 단계 더 심화하고 있다"며 "중국의 대북 정책이 정치적 차원을 넘어서, 동북3성 경제권의 발전에 기초해 북한경제를 포괄하는 '중국판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으로 재정립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북한도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개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2조에 의도적으로 '라선지대에는 북한의 주권이 행사된다'라는 문구를 삽입한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또 "북한이 '라선특별시'와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을 통해 외자를 유치하려면 투자 보장, 투명성 제고 등이 선결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외자유치 창구 역할을 할 조선국가가발은행의 투명성 문제가 북중 양국 사이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을 통해

군사적 자신감을 갖게 된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보듯 경제살리기에 본격 나선 것 같다"며 "화폐개혁 이후 일부 혼란상과 후계자 문제만 부각시켜 북한체제 붕괴가 임박한 것처럼 보지 말고, 중국의 '동북4성화' 포석을 염두에 두고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북 스위스 연방의원 "北 경제, 한계상황"

-- 4월 30일 중앙일보

이달 초 북한을 방문한 스위스 연방의회 올리히 술리에 의원은 "(거리에서 본) 북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며 "북한 경제가 한계상황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우파 스위스국민당(SVP) 중진의원인 술리에 의원은 다른 연방의원 4명과 판문점 중립국감시위원회(NNSC) 근무자 등이 포함된 방북단과 함께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평양과 개성, 판문점 등을 둘러봤고, 이후 서울을 방문해 17일 귀국했다.

부인과 함께 방북한 술리에 의원은 최근 스위스 현지 독일어 일간지 블리크(Blick)와의 인터뷰에서 가난한 나라인 북한에서 매우 우울한 분위기를 느꼈다면서 "20층짜리 고층건물에 4층까지만 물이 공급된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열악한 에너지 사정을 전했다.

올해 65세인 술리에 의원은 방북단이 항상 통제 하에 있었고, 북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할 기회는 전혀 갖지 못했다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심지어 저녁 산책조차도 감시 하에서만 가능했다"며 "우리가 호텔 출입문에서 열 걸음만 걸어가도 틀림없이 누군가 매우 친절하 표정을 지으면서 다가와 우리와 동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은 관광안내원을 설득해 텅 빈 호텔 바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갑자기 두 명의 '손님'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방북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사망한 그의 부친 김일성 주석에게 외국 정상과 외교사절들이 증정한 30만 개 이상의 선물들을 전시한 장소에 갔던 것을 소개하면서 "이런 전시물들은 마치 북한이 외국에서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북한 남흥화학기업소, 석탄 이용해 비료생산

-- 4월 30일 중앙일보

북한 평안남도에 위치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가 무연탄을 이용한 비료생산을 시작했다.

북한은 29일 김영일 내각 총리, 최태복,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와 성, 중앙기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업식을 갖고 '무연탄 가스화에 의한 비료생산공정'을 본격

가동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리무영 화학공업상은 조업사에서 "남흥의 노동계급이 비료와 화학제품 생산에서 양양을 일으켜 경공업과 농업 발전을 적극 추동하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업의 무연탄 가스화 공정은 석탄을 고온에서 가스화해 발생하는 수소를 공기중 질소와 결합시켜 암모니아를 합성, 비료를 생산하는 공법을 말하며 15정보(14만8천500㎡)의 부지에 석탄 저장 및 분쇄 시설, 가스발생 시설, 압축기실, 가스탱크 등이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비료는 원유에서 나온 나프타로 만들지만 북한은 달러 부족으로 원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무연탄을 이용한 비료생산공정의 가동은 만성적인 비료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은 29일 발표한 보도에서 "무연탄 가스화의 완성에 의해 나프타에 의한 암모니아 생산방식보다 원가를 2배 이상으로 줄이면서도 비료생산을 획기적으로 장성시키고 석유화학공업의 발전을 추동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통신은 "농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안아올 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北 금강산동결 완료..남북 후속대응 주목

-- 4월 30일 연합뉴스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동결 조치가 30일 완료된다.

북한은 27~30일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금강산 부동산에 '몰수' 딱지를 붙였고, 그 외 현대아산 등 민간 업체들이 보유한 각종 관광 인프라를 동결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23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예고한 조치들이다.

이제 관심은 정부의 대응에 모아진다. 북한의 재산권 침해 조치에 '강력 대처'를 천명한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대북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남북교역 축소, 대북 물자반출 제한 강화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조치의 수위를 검토하고 있지만 고민이 적지 않다. 우선 민간교역 축소의 경우 우리 측 업체들이 받는 타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북한에 대해 과도하게 대응하면 북한이 추가로 금강산 및 개성공단과 관련한 잔여 부동산 몰수나 계약파기, 통행 차단 등을 취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북한의 금강산 관광 관련 후속 동향과 천안함 사건의 진상규명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본 뒤 대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정부 내부에서 제기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후속 조치 시행 여부와 그 시기도 관심거리다.

지난 23일 우리 정부의 대응 여하에 따라 "더 무서운 차후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예고한 북한은 다음 카드로 개성공단 통행 제한, 차단, 금강산 관광 계약 전면 파기 등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 차단 카드를 쓸지 여부가 핵심 사안으로 등장했다.

만약 남북 교류협력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되면 남북관계는 사실상 군사적 대치만 남게 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산 청바지, 올 가을 남한서 선보여" < RFA >

-- 5월 1일 연합뉴스

북한에서 청바지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스웨덴 의류업체 '노코진스(Noko Jeans)'가 올 가을 북한산 청바지를 남한에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전했다.

이 방송은 '노코진스' 관계자를 인용, "북한산 청바지가 꾸준히 스웨덴에서 판매되고 있어 청바지를 더 생산하고, 스웨덴뿐 아니라 해외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노코진스'는 작년 12월 북한에서 만든 청바지 1천 100벌을 스웨덴에 반입해 고급백화점에서 판매하려 했지만 정치 쟁점을 꺼린 백화점 측의 퇴출조치로 상품을 철수했다가, 이후 수도 스톡홀름의 점포와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RFA는 "'노코진스'가 최근 청바지를 판매할 새로운 매장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상업광고도 제작해 지난 3월부터 TV 등 주요 매체를 통해 북한산 청바지에 대한 홍보를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처음 스웨덴에 반입된 1천100벌중 지금까지 얼마나 팔렸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남남용 두 종류인 북한산 청바지의 가격은 한 벌당 1천500크로나(미화 210달러)라고 방송은 덧붙였다.

한편 북한 내에서 청바지가 대량으로 생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2002년 삼성물산이 청바지 1만 벌을 북한에서 임가공 생산해 '카운트다운'이란 브랜드로 남한서 판매했었다. 북한은 청바지를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여겨 아직도 주민들의 청바지 착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HO 사무총장 "北 보건 의료 개선 인상적"

-- 5월 1일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의 수장으로서 9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마거릿 찬 WHO 사무총장은 30일 "북한의 의료 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방북을 마치고 WH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복귀한 찬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의 전화회견(컨퍼런스콜)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WHO와 한국정부가 함께 북한 의료 인력 및 시설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이 남북한 양측의 대화와 신뢰 구축에도 보탬이 됐다고 평가하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찬 사무총장은 "북한 주민의 백신 접종률이 90%를 넘어섰고, 병원내 감염률이 크게 낮아지는 등 공중보건상의 성과가 성공적이었다"며 "WHO가 지원하는 모자보건 사업과 말라리아 예방 사업 역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찬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의 신종플루 대응 실태에 대해서도 "좋은 대응 체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았다"고 평가하고, "전체인구 2천400만 명 가운데 10% 정도인 200여만 명 분의 백신이 북한에 공급됐다"고 밝혔다.

찬 사무총장은 또 "정보통신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2008년과 2009년에 북한내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에도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찬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평양의 김만유 병원에서 이 병원과 각 도 인민병원을 연결하는 원격진료서비스 운영을 개시하는 행사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찬 사무총장은 그러나 "의료 관련 기간시설과 장비의 질을 개선하고, 적절한 약품과 의료용품 등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북한 정부 역시 국제기구의 지원에 대한 책임성과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양실조 등의 상황은 최근 몇년 동안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영양 개선과 암, 심장병, 뇌졸중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병에 좀더 강조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북포럼 "남북교역 축소시 북한 연 2억달러 피해"

-- 5월 2일 매일경제

정부가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을 30~50% 줄이면 북한이 1년 간 2억달러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남북경협 관련 시민단체인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2일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 관련 반입을 30~50% 축소할 경우 북측은 지난해 기준으로 외화벌이에서 약 2억달러를 타격받고 근로자 1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일반교역에서 송이버섯, 고사리, 조개 등의 농수산물 반입을 50% 축소할 경우 북한은 지난

해 기준으로 1억달러 이상 피해가 발생하고 위탁가공 교역의 경우 30%를 축소하면 북한 외화벌이는 약 8000만 달러가 감소한다.

그는 또 개성공단에 입주한 14개 업체가 개성 시내를 대상으로 한 마늘까기 등의 하청을 중단할 경우 약 35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이는 남북 난감한 통일부 '사과나무' 논란

-- 5월 1일 헤럴드경제

통일부가 때아닌 사과나무 논란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햇빛은 산을 푸르게 만들고자 북한에 보낼 묘목에 들어간 사과나무가 문제가 된 것. 사과나무는 통상 평지에서 자라는 과수 작목으로 산림녹화에는 어울리지 않는 품종이지만, 일부에서는 사과가 식량으로 전용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통일부가 반대한 것 아니냐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민단체 '평화의 숲'은 최근 북한의 산림조림사업을 위해 1만 여 그루의 나무를 보낸다는 계획을 세우고 통일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또다른 시민단체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역시 북한에 과수원 조성을 지원코자 남북협력기금을 신청했다.

문제는 두 사업이 최근 통일부로부터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 공교롭게도 두 사업 모두 사과나무가 문제가 됐다. 산림청과 협의해본 결과 사과나무가 산림녹화 사업과는 맞지 않는 품종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과수원 조성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에서 보완할 부분이 발견되 반송했다는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사과나무 논란이 나오면서 통일부가 난처한 입장이 됐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이 "건전한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통일부의 사과나무 재고 요청을 비판한 것.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들까지 "사과나무에서 열릴 사과가 북한에서 식량으로 전용될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며 통일부의 조치에 불만을 제기, 논란은 더해졌다.

하지만 식량 전용을 이유로 사과나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오해라는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평화의 숲 산림조림사업 일환으로 보낼 나무 리스트를 보면 밤이나 잣 같은 작목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식량 전용을 우려했다면 이들 작목 역시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과수원 조성 사업 역시 분배 투명성 확보 등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한 것이지, 사업 자체를 가로막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 마디로 공교롭게 사과나무가 화두가 되면서 통일부가 줄지에 '소심한 통일 방해부'로 오해받게 됐다는 의미다.

추천 논문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시사점

윤병수(하나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북·중 경제협력은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정책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도를 도입하면서 탈 이념적이고 현실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을 선택한 이후 과거의 혈맹관계에서 벗어나 점차 국가이익을 기반으로 한 정상국가관계로 이동하여 2000년 이후에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정착하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양국의 경제협력교류는 북한의 중국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무역적자 규모를 확대시켜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4성론', '위성국가론', '경제예속론' 등 경제와 우려의 시각이 다수 존재한다.

한국전쟁이후 전후북구를 지원하면서 시작된 양국의 경제협력은 혁명동지로서의 혈맹관계라는 특수관계 속에서 양국의 정치·경제적 여건에 따라 기복을 겪으면서 발전해 왔으나,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한 이후 탈이념적, 현실주의 대외경제정책의 전환을 계기로 변화한다.

1990년 초반 사회주의붕괴의 영향으로 노선투쟁을 종결한 중국은 1992년 10월 한·중 수교를 체결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우호가격'에 의한 교역의 절제와 경화결재방식을 요구하는 등 경협방식의 전환을 추구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과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북한체제의 조속한 안정과 안보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군사적, 정치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후진타오 체제의 대북정책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고,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추구.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적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의 복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중 양국관계는 기대와 불신,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굴곡의 협력관계가 전개되고 있으나 경제협력관계에서는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중국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에너지, 식량 등 전략물자를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중 교역은 2000년 4.9억 달러에서 2009년 26.8억 달러로 5.5배 증가했다.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줄어들자 부족한 에너지와 식량 등 전략물자를 중국에서 조달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남북교역을 통해 획득한 경화를 토대로 중국으로

부터의 물자수입을 확대했다. 북한의 대중국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북 핵문제 사이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전략물자 위주의 교역품목 구조변화, 만성적 대중국 적자구조와 적자규모의 급증,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변경무역형태의 활성화 등이 특징이다.

중국의 대북한 투자는 2003년을 기점으로 투자금액과 투자주세에 있어서 큰 변화. 즉 초창기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004년부터 북한의 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 목적의 투자가 급증하여 대북 총 투자액의 70%를 상회하고 투자금액도 2억 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의 중앙정부와 당 차원의 전략적 판단과 주도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북한의 투자 유치 노력도 투자확대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또한 지하자원 개발에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 3성 진흥을 위한 동반개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북중 경협의 강화가 남·북 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보면 기회요인으로는 북한 경제회생을 위한 유력한 대안이며 동반개발투자는 북한의 산업발전을 유인할 뿐 아니라 대외개방과 산업구조 개편, 외국 자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국민소득 향상과 구매력 확대에 이어져 남북 소득격차가 완화될 수 있고 남북경협의 증대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위협요인으로는 중국의 동북지역 산업구조에 편입되어 북한의 외자유치와 산업구조 재편에 장애, 지하자원의 대중출생 및 의존도 심화로 인한 영향력 약화 및 남북경제협력 추진의 걸림돌, 특히 '南南北北'의 개발 분할구조로 정착되고 남북경색이 지속될 경우 남북경협사업이 북·중 경협사업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의 전략적이고 유연한 접근, 북한경제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의 남북경협사업 추진 모색,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상호 신뢰회복 등이 요구된다. 특히 대북 자원개발 참여는 90%를 해외에 의존하는 실정에서 가장 경제성이 높은 사업으로 적극 추진이 요구되며, 한편 사업성뿐만 아니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국의 동북진흥개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원문은 <http://www.hanaif.re.kr/kor/jsp/board/board.jsp?sa=ci&bid=90&pg=1&no=22674>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는 최근 북한 단신

경흥관 호프집 리모델링 마쳐

○ 평양시 보통강구역에 자리잡고 있는 경흥관 호프집이 리모델링을 마쳤다. 예전 자취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 감각으로 꾸며진 경흥관 호프집은 100% 보리맥주, 30% 흰쌀맥주, 50% 흰쌀맥주, 70% 흰쌀맥주, 15도 흑맥주, 10도 흑맥주 등 7가지 맥주를 제공할 수 있는 현대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신형고속 충전기 개발

○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가 부피가 작고 쓰기 편리하면서도 제작 비용이 적게 드는 신형 고속충전기를 개발했다. 이 충전기는 한두 시간 안에 90% 이상의 충전 용량으로 축전지를 충전하면서도 축전지 수명을 1.2배 이상 연장시켜 주며 유산염화된 축전지들에서 유산염을 제거하는 능력도 높다고 통신은 설명했다.